

한미동맹의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연구

유지훈*, 김재동
한국국방연구원

A Study on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s an Indo-Pacific Maritime Partnership

Ji-Hoon Yu*, Jae-Dong Ki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요약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내의 육상기반위협(land-based threat) 대응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해양안보 파트너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한미간 해양안보 파트너로서의 발전 필요성과 잠재력은 국가 간 경쟁 및 분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환경과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간 강력한 해양안보 파트너로서의 성장 가능성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한미간의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및 주변 정세를 고려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하에서 한미동맹의 역할확대와 연계한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Historically, the ROK-U.S. alliance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land-based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however, the ROK-U.S. alliance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stronger maritime partnership with substantial consequences for Indo-Pacific security. This likely results from shifting regional threats and capabilities, particularly the intensification of regional competition at sea and the ROK's growing blue-water navy. Despite this potential, the ROK's vulnerability to Chinese economic coercion hinders progress toward greater ROK-U.S. maritime cooperatio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incremental steps to bolster their budding maritime partnership at both the strategic and operational levels, adopting a gradual and salami-slicing approach. In this context, this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ROK-U.S.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nd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to expand the role of the ROK-U.S. alliance in an evolv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Indo-Pacific.

Keywords : The ROK-U.S. Alliance, Land-Based Threat, Maritime Partnership, Indo-Pacific Security

1. 서론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의 주요임무는 한반도내의 육상 기반위협(land-based threat) 대응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편향성은 한미동맹이 현존하고 있는 북한의 지상

위협 대응 및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해양안보 파트너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한미간 해양안보 파트너로서의 발

*Corresponding Author : Ji-Hoon Yu(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email: yjhnavy3@hanmail.net

Received July 11,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August 31,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전 필요성과 잠재력은 국가간 경쟁 및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환경과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간 강력한 해양안보 파트너로서의 성장 가능성은, 중국의 강압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한미간의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및 주변정세를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한미동맹이 지상위협 중심의 안보동맹으로 진화된 배경 및 한미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해양위협과 해양안보 파트너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본 후, 한미간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의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의 지상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간 연합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미 전력의 한반도내 증강 배치를 주장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 내로 국한시키거나 지상위협 대응에 제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1]. 북한위협에 고착된 육상위협중심의 편향된 안보개념은 급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간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 및 실효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 속에서 향후 한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본론

2.1 육상 중심의 유산

한미동맹은 전통적으로 해안보다는 육상중심의 안보 개념에 치중되어 왔다. 냉전기간 동안, 북한에 의한 남침 가능성은 동맹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간주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의 협준한 지형에서 치러진 한국전쟁의 산물이었다. 한국은 오랜기간 북한의 육상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아왔다. 이러한 육상중심의 안보개념은 냉전기간 한국의 해군력 증강 및 현대화 노력에 걸림돌이 되었다.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한미간의 우발계획은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도착 후 전쟁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을 때 까지 북한 지상군의 남침 및 수도 서울까지의 진입을 저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2]. 스트롱 실드(Strong Shield) 및 팀 스피릿(Team Spirit)과 같이 상호작전운용성을 강화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 대규모 연합훈련들은 해상보다는 육상에서의 전투상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육상중심의 억지력과 방어력 강화는 냉전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왔다. 주한미군(USFK)은 여전히 제8군 산하의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을지프리트갯가디언 연습(UFG) 및 독수리 연습(Foal Eagle) 등과 같은 한미간 주요 연합훈련들도 지상에 기반한 북한 위협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해상에서의 한미간 해군훈련은 한반도 연안에서의 위협대응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내 다수의 안보전문가 그룹도 해양안보 이슈 및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지상에 기반한 북한 위협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의 외교·안보·국방관료들조차 해양안보 이슈를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부차적인 고려사항으로 인식함에 따라 해양안보 수호를 위한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과도한 예산낭비로 치부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상중심으로 고착된 안보개념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역내 강력한 해양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의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해양에서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지상중심의 억지력과 방어력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해양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2 해양에서의 공동 이익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에서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첫째,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역내 지상과 해양에서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유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역내 지상과 해양에서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은 특정 국가가 압도적으로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변국가들을 지배함으로써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3]. 이러한 패권국의 등장은 한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한국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역내 패권국의 등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잠재적인 경쟁국가가 역내 패권국이 되기 위해 막강한 해군력 증강을 통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은 모두 자국 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을 해상교통로(SLOCs: Sea Lanes of Communications)의 사용에 의존하고 있는 무역국가이다. 한국의 거의 모든 에너지원은 인도양,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4].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통해 한국의 전자제품,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기타 주요 제품들이 아시아, 북미 및 유럽 시장으로 수출된다[5].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교역을 위해 인도·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상교통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데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아래 Fig. 1은 미국과 한국의 해상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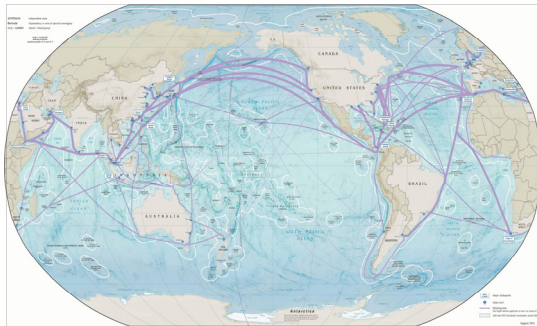


Fig. 1. Sea Lanes of Communications

셋째,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파트너로서 역내 해양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한다. 여기엔 해양에서의 주권과 영토보전,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 포함된다[6]. 한미 양국은 무해통항권을 포함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기본 신조를 준수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규범 준수를 통해 역내 해양질서 유지 및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2.3 변화하는 안보위협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은 한미간의 해양안보 협력 필요성을 더욱 촉진 시키

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 요인의 등장을 고려하여 한미 양국은 해양안보로 시각을 확장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안보위협 종류와 수준이 날로 증대 및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양국의 해양주권 및 해양에서의 이익이 수정주의적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해양력 투사를 거부하기 위한 반점근·지역거부 전략(A2/AD)능력 강화를 위해 동평(DF-21D)과 같은 대함미사일 및 잠수함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남중국해와 인도양 등 자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7].



Fig. 2. China's A2/AD Capabilities

위의 Fig. 2는 미국 전력의 해양접근을 거부 및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추진 중인 반점근·지역거부 전략(A2/AD)의 개념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중국은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해군력 증강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첫 번째 항공모함을 배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후속 항공모함의 추가 건조 및 배치를 통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방어태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해군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운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이어도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를 경험하고 있다[8].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 및 해군력 증강은 한미 양국의 해양이익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현대화는 중국과 이웃 국가들 간의 군사력 격차를 가속화 시켜 역내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도,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에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우위달성을 효과적으로 억지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아래 Table 1은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 현황을 보여준다. 2020년 중반 경에는 양적 측면에서 중국해군이 미국해군을 추월 할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1. Numbers of Battle Force Ships, 2010-2030

	2010	2015	2020	2025	2030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3	4	4	6	8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5	6	7	10	13
Diesel attack submarines	48	53	55	55	55
Aircraft carriers, cruisers, destroyers	25	26	43	55	65
Frigates, corvettes	50	74	102	120	135
Total China navy battle force ships, Including types not shown above	220	255	360	400	425
Total U.S. Navy battle force ships	288	271	297	n/a	n/a

중국의 해군력은 한국과 미국이 사용하는 해상교통로의 자유로운 사용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쟁이나 위기상황시 강력한 해군력을 이용한 해상교통로 차단 등과 같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은 해상을 통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공세적 행동을 통해 해양에서의 힘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서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더욱 과도하게 자국의 영토주권을 주장할 것이며, 역대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정립된 국제규범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침해할 것이다.

다른 불량 국가 및 행위자들도 한국과 미국의 해양주권 및 이익 수호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시도하거나 자유로운 통항을 방해하는 이란의 행동은 해양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해상교통로 사용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란의 이러한 공세적 행동은 주요 에너지 수입 교역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 과거 한국 국적 선박인 한국 케미호의 억류 사건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러한 가능성은 단순히 상상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위협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해양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덴만, 말라카 해협 및 남중국해에서 증가되고 있는 해적활동은 한국과 미국의 해상을 통한 교역활동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해적활동의 증가는 빈곤, 실업, 중앙정부의 와해 및 공권력이 취약한 국가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해적활동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한국의 해군력 증강

한미간 해양안보 파트너로서의 발전 잠재력은 대양해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국의 해군력 증강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과 한국의 정치적 변화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재고와 한국 해군 현대화를 위한 장기간의 국가적 노력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9].

한국해군은 대양에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최신형 군함들을 확보·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함정에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유도미사일을 갖춘 세종대왕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III)을 포함한다. 현재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3척을 추가 건조 중이다. 또한, 한국해군은 새로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 한국형 구축함(KDDX)과 수상 및 지상 표적 공격을 위한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수 있는 5천 톤급의 다목적 미사일함을 확보할 계획이다[10].

더불어, 도산안창호함과 같이 더욱 규모가 크고 성능이 뛰어난 공격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다. 최근의 잠수함들은 수중에서의 은밀성 제고를 위해 공기불요추진(AIP)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현재 3척의 3천 톤급 잠수함이 건조되었으며, 6척이 추가로 건조될 예정이다. 한국해군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도 고려하고 있으며,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는 한국해군의 대양해군 건설 노력과 더불어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추동력을 극대화 시킬 것이다[11]. 한국해군은 해상기반 항공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독도함급 상륙감습함 2척을 이미 운용하고 있으며, '해군비전 2045'에서 제시했듯이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 및 운용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을 확보할 계획이다[12].

한국해군은 한반도를 넘어 유사시 더 넓은 대양으로의 전력 투자를 위해 동중국해의 주요 해상교통로에 근접해 있는 제주도에도 첫 기동 전단을 창설했다[13]. 이러한 한국해군의 발전은 한국의 핵심 해양이익을 증진 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략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미국과의 연대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5 한미간의 해양안보 강화 노력

한국과 미국은 이미 해양안보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해양질서 및 해양공공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14]. 전략적 수

준에서, 한미 양국간 이뤄진 공동성명들은 한미동맹이 지역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임을 주기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한미간 더욱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15]. 한미 양국의 미래 국방비전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내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의 목표와 비전 공유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양국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및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 및 헌신을 강조했다[16].

작전적 수준에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원해에서의 퍼시픽 뱀가드(Pacific Vanguard), 퍼시픽 실드(Pacific Shield), 림팩(RIMPAC) 등과 같은 다국적 연합훈련 등에 참가함으로써 한미간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한미해군은 아덴만 해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연합전단(Task Force 151)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해양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한국의 연근해를 포함한 전 해양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역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압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은 한미동맹의 해양안보협력 강화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감하고 있지만, 한국의 최대 경제 및 교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대응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17].

한국은 중국의 수정주의적 해양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동참할수록 중국의 경제보복 위협에 더욱 노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한국에 행한 경제적 제재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s) 참여와 같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활동 참여를 자제해 왔다[18]. 그러나, 한미 양국은 중국의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살라미(Salami slicing)” 전술과 같은 점진적인 방식을 통한 해양안보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국이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 양국은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해양안보 협력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직접적인 강압 및 견제

를 극복할 수 있다.

2.6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접근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국방대화 등과 같은 정부간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해양안보협력과 관련한 의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은 양국 지도자들에게 해양안보 문제, 특히, 서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역내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19년 미국-영국-일본 간 체결한 3국 해군협력협의체(Tr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에 참여해야 한다[19]. 더불어, 미국, 호주, 일본, 인도를 포함하는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도 참가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다자대화와 협력활동 참가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의 해양안보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작전적 수준의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지상기반 위협 대응에 집중해온 주한미군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 및 위협에 대비한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약 19,500만 명의 미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는 반면, 해군은 약 35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20].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주한미군 병력 구조는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위 계급의 주한미해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대규모 해군력을 증강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미간 해양안보 협력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주도에 위치한 한국 해군기지에 미군 해군전력을 상시 주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해군력을 전진 배치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미 해군간 결속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인도양 및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 보호 등과 같이 한반도 연안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원양에서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한미간 연습은 단순한 통항 및 기동 연습뿐만 아니라, 해상을 통한 군수물자 보급, 공동의 위협 억제, 대잠수함전, 방공작전 및 수상전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공모

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향후 원거리 항공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양국의 연합훈련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유사시 해양에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작전운용성 증진을 통한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해양공공제(Maritime Commons)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한미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해상훈련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21]. 여기에는 호주, 일본 및 인도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말라바 훈련(Malabar Exercise), 호주, 프랑스, 일본 및 인도와 실시하는 라페루즈 훈련(La Perouse Exercise) 등이 포함된다. 다자간 연합해상훈련 참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역내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긍정적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미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해양공공제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자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원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해군의 작전능력 확보 및 강화는 한미간 광범위한 정보공유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보완하여 호주와의 새로운 3자 정보공유협정을 포함한 다자간 정보공유체계를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고려한 한미동맹의 해양안보 협력강화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북한위협에 고착된 육상안보 중심의 편향된 안보개념은 한미간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은 역내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확대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해양안보질서 유지를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에게 더욱 많은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안보전략기조를 고려시,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확대 및 미래 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연구에서 제시한 한미동맹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해양안보 도전 위협 요인들을 직면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도전과 위기들을 양국간 해양안보 협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 추진 및 한미동맹에 대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역내 해양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의 일관된 노력은 궁극적으로 강대국간 전략경쟁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결속력을 강화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부여할 것이다.

References

- [1] Y. Yeongmi & P. Kicheol. "An Analysis of Strategic Effects of the ROK-U.S. Alliance and Relocation of the USFK: Implentation and Prospect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25, No.1, pp.17-36, Mar. 2013.
DOI: <http://doi.org/10.22883/kida.2013.25.1.002>
- [2] K. Tongfi. "The Benefits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Beyond Deterring North Korea", CSDS Policy Brief, Sep. 2021.
- [3] L. Desmaele and L. Simon. "East Asia First, Europe Second: Picking Regions in U.S. Grand Strategy", War on the Rocks, Aug. 2019.
- [4]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ountry Analysis Executive Summary South Korea, Oct. 2020.
- [5] T. Roehrig, "South Korea: The Challenges of a Maritime Nation", Maritime Awareness Project, Dec. 2019.
- [6] U.S. DOD, Public Summary of Future Defense Vision of the Republic of Korea(ROK)-U.S. Alliance, Nov. 2019.
- [7] LCDR J. Turnwall, USNR, "The Navy is Losing the Missile Arms Race",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5, No.11, Nov. 2019.
- [8] CAPT J. E. Fanell, USN(Ret.), "Strike Group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6, No.3, Mar. 2020.
- [9] Y. Koda, "The Emerging Republic of Korea Navy-A Japanese Perspectiv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3, No.2, pp.1-23, Mar. 2020.
- [10] R. Farley, "The South Korean Navy Has Big Plans Ahead", The Diplomat, Aug. 2019.
- [11] J. Yu and E. French, "Should the United States Support a Republic of Korea Nuclear Submarine Program?", Naval War College Review, Vol.73, No.1.

pp.1-23, Jan. 2020.

- [12] J. Yu and E. French, "Why South Korea's Aircraft Carrier Makes Sense", *The Diplomat*, Mar. 2021.
- [13] I. Bowers,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Seapower, Strategy, an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pp.1-239, Aug. 2018.
- [14] U.S. White House,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2013.
- [15] U.S. DOD, Public Summary of Future Defense Vision, Nov. 2019.
- [16] U.S. White House, U.S.-ROK Leaders' Joint Statemet, May 2021.
- [17] U. Friedman, "How to Choose Between the U.S. and China? It's not That Easy", *The Atlantic*, July 2019.
- [18] D. J. Lim, "Chinese Economic Coercion during the THAAD Dispute", *The Asan Forum*, Dec. 2019.
- [19] M. Eckstein, "CNO Gilday Signs Tr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 with U.K., Japan Navy Heads", *USNI News*, Nov. 2019.
- [20] Y. Shin and J. Lee, "Factbox: U.S. and South Korea's Security Arrangement, Cost of Troops" *Reuters*, Mar. 2021.
- [21] A. R. Poulin, *USN*, "The Global Maritime Coalition 2.0",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6, No.3, Mar. 2020.

김 재 동(Jae-Dong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사)
- 2007년 2월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 2020년 2월 :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수료)
- 2007년 5월 ~ 현재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데이터마이닝, 최적화, 시뮬레이션, 국방정책

유 지 훈(Ji-Hoon Yu)

[정회원]



- 2006년 12월 : 미국 해군대학원 안전보장학과 (안전보장학석사)
- 2013년 8월 : 미국 시라큐스대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 2022년 1월 ~ 현재 :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관심분야〉

해양안보, 한미동맹, 외교/안보/국방 정책/전략